

#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 도입한다

## 황주홍 등 초선 13명 법률안 발의 민주 '특권 폐지' 개혁 방안 발표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 폐지 ▲영리목적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응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

- 민주 추진 주요 개혁안**
-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
  - 영리목적 겸직 금지
  - 면책특권 등 남용 방지

무원과 달리 영리업무 활동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으며 '19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300명 중 94명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겸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과는 달리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단, 봉사활동을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일반공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범의 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 등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종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해 징계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황주홍·김광진·박수현 등 초선 의원 13명은 지난 22일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법률적으로 위헌적 소지도 크다고 보고, 발의·투표·의결 요건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

# 여 8·20전대 강행...非朴 "경선불참"

## 黨지도부·친박계 "현행 틀대로 갈 수밖에 없다" 경선무산 가능성 고조...오늘 최고위 중대 분수령

새누리당 비박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 논의가 친박계의 반대로 벽이 부딪힌 가운데 비박 대안주자들이 경선불참 의사를 거듭 밝혀 8·20전대 경선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 주자 3인은 "완전국민경선제 경선 틀 개정 없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며 연일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친박은 절대불가 입장에

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누리포럼에서 "당 대표로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당내 갈등으로 영종할 데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비박주자들은 당장 경선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선틀 변경을 반대하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지금 대선에 안주해 그야말로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로의 경선틀 변경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이들 비박 주자 3인방은 경선불참의 강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비박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미니경선을 통한 3인방간 후보단일화 아이디어도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박지원 "이명박근혜 남매 입만 열면 중복 얘기"

## 민주, 여 '중복공세' 역공

민주통합당이 여권의 '중복 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정성호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 가는데 여당의 '중복 불 지피기'는 끝이 없다"며 "중복행위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관련 의혹은 밝혀내 되는 만큼 국정원은 신속히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빠인 이명박 대통령이 칠레에 가서 또 중복주의 운운하고 나섰다"며 "이명박근혜 남매는 '중복'이 아니면 입을 못 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박남매는 중복주의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만약 이렇게 중복논쟁을 계속하면 어제 친일인명사전을 갖고 얘기했던 것 이상의 문제를 항상 준비하고 있

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들어보이며 "이 나라 친일 중부의 원조는 박정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산티아고 숙소호텔에서 동포들과 강담회를 열어 중복 논란과 관련해 "그런 것들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두관 경남지사 "내달 10일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24일 "(당 대선 경선을 통과한 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아권 후보를 뽑기 위한 최종경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과 함께 강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안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와 플레이오프를 통해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종 경선 틀은 당 도모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음달 10일께 지사직을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 참여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엔 대선 출마와 관련, 그는 "망설이고 그런 것 없다. 아직 결정 안 한 것이 있겠나, 모두 다했다고 말할 못할 뿐"이라며 "모든 선출된 당시 당규상 당원 주소지에 대해 규정도 없어서 단계 사무실 몇 곳을 주소지로 해 입당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임태희 "내년 5·18엔 국민대화합 이루었으면"

## 광주 '서석포럼' 초청강연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24일 "내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5·18이라는 시대적 유물을 정리하고 싶다. 이는 국민 대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의 응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시 남구 프라도 호텔에서 열린 '서석포럼' 주최 초청강연회에서 "내년 5·18 때 광주 시민들과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적개심으로 무장했던 집안군들을 한 자리에 불러 국민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응서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24일 광주시 남구 프라도 호텔에서 열린 '서석포럼' 주최 초청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그는 특히 "광주 시민들의 응서 없이 국민 대화합에 대해 얘기할 수도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광주 시민들이 응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광주는 도덕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온 국민이 (광주·전남 시·도민들) 머리 숙여 존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석포럼' 주최로 진행된 이날 초청강연회에 임 전 실장 지지자 등 내·외빈 100명이 참석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통합진보 "부정 당원 선거권 제한"

통합진보당은 지난 23일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당원에 대해 당 대표,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거의 투표권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날 "부당 당적으로 확정되는 당원은 통합진보당 8개 선거 가운데 지역과 무관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기도 성남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현재 기본조사를 완료했다"며 "동일 주소자인 당원들 중에 거주지, 직장,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 당원들에게 최종 확인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박혜자 의원,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사회복지분야 전 사업으로 차등보조금을 확대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차등보조금은 개별 보조 사업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늘려왔다. 특히 일부 복지사업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 차등보조금이 복지 사업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복지 수요는 많은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경매투자

▶실전경매 배유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 내실 본

▶4명한정 /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임장활동비 / 교재비 등 별도 회비있음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공동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